

“내년 경제 더 어려워… 준 스태그플레이션 차원 대응 필요”

대량 실업, 기업 부도 등 없어 경기침체 단정하기 어렵지만 불확실성 높고 돈맥경화 확산 정부 적극적인 정책 필요 지적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 불황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량실업이나 기업 부도 등이 없고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해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이라며 이를 가정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7일 메트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지표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해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며 “내년 정부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지만, 이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이 달라진다면 보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고물가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

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대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반한 현재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오일쇼크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전쟁 상황에서 공급망이 경색되면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된 반면,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됐고 경기침체를 부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오 연구원은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 불황을 야기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 변수에 따라 내년 연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오 연구원은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돈을 풀기 사실 어렵다”면서 “그래서 최소한 내년 정도는 가야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선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 미국 자금시장 쪽이 관건”이라며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건 내년 상반기고 경기 저점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 목표치보다 높게 형성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침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량실업을 수반하지 않다는 점, 통화정책이 속도조절에 돌입한 것이라 분석도 경기침체로 단정하

기 어려운 이유다. 정 연구원은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대량실업을 수반하지만, 이번은 지난 2008년처럼 설비 등 생산 능력 과잉이 거의 없다”며 “실물 부분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기업 부도 위험 증가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CDS(신용부도스왑)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제 과거 금융이 꼬였을 때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낮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그렇게 부도가 임박했다는데 이번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왜 그렇게 살까요”라고 반문하며 “마이크로한 리스크 확률은 있지만 매크로한 리스크의 확률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尹 대통령 10·29참사 첫 국민 사과 “국민께 죄송,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책임자 엄중처벌… 문제점 개선” 경찰 혁신, 인파관리, 보고체계 등 각종 재난사고 제도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와 관련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업무의 대대적인 혁신을 비롯해 인파관리, 신속한 보고체계 등 재난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10·29 참사의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쪼여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 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BUY KOREA BUY BOND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95호(2022.11.01~2023.11.01)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부도 파산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등급은 AAA/AA+ A/BBB 각 +0, -순으로 구분됩니다.

KB증권